

다산포럼



전성근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코로나가 장기간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출현했다.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4월이면 재·보궐선거가 시작된다. 서울 시장과 부산시장 직임자를 두고 여야(與野)할 것 없이 정치적 이슈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등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무너진 공공성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재판을 지연하고, 혐의 사실을 흘린다. 누군가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철학자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정의한다. 공자는 정치(政)를 바름(正)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은 공정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가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 말이 있다. 명심해야 한다. '경제(經濟)라는 말은 '경국제민(經國濟民)이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이다. "국가를 경영해서 국민을 구제한다" "세상을 경영해서 국민을 구제한다"로 번역할 수 있다. '구제(救濟)의 목적어는 재해를 입거나 도탄에 빠진 사람들이다. 경국과 경세는 방법

교육과 정치의 현주소

이지만 제민은 목적이다. 목적을 망각하고 방법에만 빠져서는 곤란하다.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지 못하는 시대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상대방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내 생각만이 국민의 뜻이고 명명이다. 나만이 서울시를, 부산시를 살릴 수 있다. 상대방은 물리쳐야 할 적일 뿐이다. 정치가는 예의를 갖추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잘못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 맹자가 말한 수오지심(羞惡之心)이 그것이다. 맹자는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수오지심을 버려 두고 정의를 논하는 것은 공허하다. 교육의 현실은 또 어떠한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국가적 문제이다. 수시와 정시 결과 서울·경기에 소재한 대학과 지방대학의 희비는 극명하게 나뉘었다. 올해 초까지 진행된 입시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급선무를 해결하지는 것이었다.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의 기반을 둔 지역 혁신 사업, 일명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도 확정되었다고 한다. 지자체는 지방 소멸에 대비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헛수고가 아니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입 정원외 6만여 명 감축되었

다. 전체 감축 인원의 76%는 지방대학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BK21플러스)도 서울의 주요 사립대가 지방의 거점 국립대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본분과 사립대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이른바 대학 3주기 평가로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대학들은 정신이 없다.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받지 못할 경우, 대학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대학의 인원 감소와 재정 제한은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은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 교육의 보편 복지가 필요한 이유다. 지방과 중앙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한다. 공염불(空念佛)이다. 교육부 폐지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역 대학 정원 미달을 '충격'이라고 한다. 충격을 넘어 '공포'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충격과 공포라는 표현은 온당한 표현이 아니다. 예견된 일이기 때문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사자성어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국가와 대학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했는가. 인간의 본질과 사회의 속성 그리고 세계의 진실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학의 교육은 잘나가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국가의 정치는 특정한 집단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현실에서, 인문학에 대한 지원 없이 그 필요성만을 떠든 것이 이미 영겁(永劫)이다.

기고



조순계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맞이하던 때, 각종 언론에서 코로나 민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해 보드했다. 헤드라인을 차지한 내용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단연 '온라인에 질렸다'는 응답이었다.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콕'을 장려하는 코로나 시대에 의식주는 물론 교육·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의 영역이 확대됐다. 대학에서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고, 축제나 취업박람회 같은 행사 역시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등 떠밀리듯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온라인 방식은 결국 '질린다'는 수식어가 붙고 말았다. 학교에 안 가도 된다고 좋아하던 초등학생들도 이제는 등교하고 싶더라 아우성이다. 일부 대학생은 온라인 교육의 질에 대해 불만을 품고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어디서부터 잘

코로나 1년, '언택트'로 잃은 온기 되찾으려면

못된 것일까. 이에 대해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도 깊은 성찰에 빠졌다. 여러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그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기계적인 전환'에만 급급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결론이 나왔다. 눈을 마주치고 질문을 주고받거나, 표정을 읽는 등의 일련의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옮기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터. 그로 인해 정서적 교류 역시 역부족이었다. 코로나 학번이라 불리는 20학번들은 지도 교수와의 친밀도가 선배들에 비해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어려운 시국에 다시 빛이 들더라도 비대면 강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기술적인 준비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보듬는 '정서적 전환'이다. 지난해 어느 날,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우리 대학의 '후진학선도사업단'이 온라인 수강생들에게 택배를 보내다며 분주하길래 관심을 두고 지켜봤다. 내용물을 살펴보니 노트, 펜, 필통, 접착식 메모지 등의 문구류를 담은 스티디 키트란다. 그 안에 손글씨로 쓰인 쪽지가 눈에 띄었다. "수강생님, 안녕하세요. 조선이공대학교 빛고을직업교육거점센터의 교육과정에 따뜻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진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지만 큰마음을 담아 '자기 주도 학습 지원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70% 이상 수강하시어 수료하는 기쁨 꼭 얻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별것 아닌 인사말 몇 마디일 뿐인데 수강생의 마음을 데우려는 노력이 보였다. 학교에 발조차 못 딛는 비대면 강의 수강생에게 이 예교스러운 택배가 조금의 위로가 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정서적 전환이 동반된 일례로 볼 수 있지만, 온라인이 질렸다는 이들에게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는 않는다. 강의실에서의 만남에 비해 쌍방향 소통에 장애 요인이 많은 온라인 공간이지만, 그럴수록 대대 일 소통에 힘써야 한다. 교수의 관심이 학생 개인에게 모두 닿아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학생 상담은 취업과 진로 쪽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학습 점검 차원의 상담도 빈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질의응답도 원활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 32년간 교단에 선 교육자로서 마음에 늘 새기고 실천하려는 문장이 있다. '어린아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Z세대'라 불린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이 친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인간관계를 이어 가고, 심지어 그 안에서 친구를 새로 사귀기도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는 일이 낯설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Z세대를 주목해 보자고 말하고 싶다. 이들은 온라인이 마치 공인 것처럼 실시간으로 숨 쉬듯 소통하며 시간을 보낸다. 온라인 인간관계가 익숙한 학생들을 눈여겨보면 따뜻한 '온(溫)택트'의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청춘 특특



김성우 조선대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조대신문 기자

지난 1월 수능 국어 과목 '일타 강사'로 유명한 박광일 씨가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해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받고 있다. 이들은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다수의 IP를 생성한 뒤 비방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속해 있던 인터넷 강의사이트는 수강생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막고자 중국 당국이 '댓글부대'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즈 등이 입수한 중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규제 기관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정보를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당국이 근로자를 고용해 게시물에 긍정적인 댓글을 달도록 하고, 코로나19의 존재를 처음 알린 의사 리원량이 숨졌을 때 웨이보 등 SNS에서 죽음

댓글이 여론인가

을 애도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사실상 댓글 부대를 운영한 셈이다. 뉴욕타임즈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중국에선 수십만 명이 시간제로 일하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을 올리고, 국가 이념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공유한다고 추정했다. 이렇듯 어느 국어 강사의 댓글 조작 사건부터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부정 여론 통제를 위한 댓글 부대 운영까지 여러 포털 사이트의 기사 등에 댓글을 달아 여론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이른바 '여론 물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느 순간 댓글 창은 모든 이들의 표현의 장이 아니라 10%에 불과한 '댓글러'들의 놀이터가 돼버렸고, 이들이 여론을 움직이는 것 같다. 스마트폰을 켜면 네이버에 들어가 사회·연예·스포츠 등 여러 기사를 찾아보는 습관이 있다. 악성 댓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연예계와 정치 댓글 작성이 대부분 막혀서 악질적 댓글 문화는 많이 사라진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댓글 읽기를 꺼린다. 기사의 본질과 거리가 먼 언젠으로 빠지는 것을 보면 나 역시 그 언쟁을 의식하는 것 같고, 소수 유저가 판치는 댓글 창에 감정이 휩쓸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다. 네이버 기사만 봐도 그렇다. 한 정치인의 이름을 검색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창을 클릭하면 육이 대부분이고 댓글 당 최대 수천 개의 공감과 연고 있다. 심지어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이끌기도 한다. 네이버 아

이디는 한 사람이 최대 세 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다 여러 웹사이트에서 아이디를 살 수도 있고, 누구나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 설명돼있다. 누구에 대해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싫어요' 버튼을 눌러 화면 상단에 안 뜨도록 한다. 이 점을 악용한 댓글 여론 조작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공감을 많이 얻은 댓글은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다. 그러면 그 댓글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위축된다. '댓글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공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댓글이 일부 악성으로 치달으면서 악플이 지식인의 자기 검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공론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터넷에 글을 쓰는 사람들도 '댓글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댓글을 통해 심한 비난을 받으면 글 쓸 용기가 꺾이고 조심스러워진다. 같은 이유로 댓글 달기도 주저한다. 겉으로는 공론의 장이 활성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헐뜯기지 않기 위해 숨죽이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댓글이 여론인가? 댓글에 다수가 같은 의견을 표출하더라도 그보다 더 다수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숨기고 있을 뿐이다. 일상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시대, 우리는 '댓글의 역설'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社說

특별법 통과 '문화도시 광주' 토대 마련됐다

광주 지역 최대 속원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개관 5년을 갓 넘긴 아시아문화전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안화 시도에 따라 기형적인 이원 구조로 출범했다. 이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았고 지역사회와 소통도 부족했다. 그동안 조직 일원화와 국가기관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엇그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찬성 168표, 반대 75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수 차례 논의를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에 진통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가 까스로 넘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그동안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조직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기간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됐다. 쟁점이 됐던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문제와 관련하여서, 국가 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은 삭제하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승계하도록 수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문화전당은 그동안의 혼선을 극복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따라서 이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 정비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매진, 지역을 넘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도 각광받는 '문화발전소'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투기 방지 위해 도시정비법 보완 필요하다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최근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분양 대상자'라고 판시했다. A씨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2007년 8월) 이후인 2015년 4월, 정비구역 내 다세대주택 중 한 개를 구입하고 조합의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조합 측은 관련 법을 근거로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양도한 경우 대수 조합원에게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슷한 항소심 판결을 들어 A씨에게도 재개발사업 분양 대상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지역 주민들 3명이 낸 소송에

서도 같은 취지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조합 설립 인가 후 개발구역 내에 집을 산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세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만 받은 채 이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분양받는 게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판결이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의 분양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이후 비싼 값에 되팔려는 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법원은 오로지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이유를 들어 관계 법령의 유추확장 해석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지역이 투기의 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분양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無等鼓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정의당이 오는 23일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광주 출신 강은미 원내대표는 지난주 전국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한 달간 우리가 경험한 고통은 한국 사회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상처'라며 '정의당은 아픔 만큼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실상 첫 진보정당으로 나선 민주당(민노당)이 출범점이었다.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 창당,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 정당이 되면서 제1야당이 됐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 원내 정당이 되지 못한 채 제2야당이 됐다. 정의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실상 첫 진보정당으로 나선 민주당(민노당)이 출범점이었다.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 창당,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 정당이 되면서 제1야당이 됐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 원내 정당이 되지 못한 채 제2야당이 됐다. 정의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실상 첫 진보정당으로 나선 민주당(민노당)이 출범점이었다.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 창당,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 정당이 되면서 제1야당이 됐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 원내 정당이 되지 못한 채 제2야당이 됐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